

# 산·관·학 협력을 통한 무역전문인력 양성의 과제\*

- Trade Incubator 사업을 통한 무역인력양성의 시사점 -

A Study on How to Train Students to be Experts in International Trade Using the  
Government-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 Specialized in the Implication of the Trade Incubator Program -

조정곤(Chung-Kon Cho)

강릉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산·관·학 협력과 인력양성모형 | 참고문헌     |
| III. TI사업과 무역전문인력양성  | Abstract |
| IV. 무역인력양성의 과제와 방향   |          |

## Abstract

The Trade Incubator Program at the Korean Universities bridges the gap between traditional industry world and education by offering a unique curriculum to a select group of highly qualified undergraduate students. Working closely with its corporate partners, the TI Program grooms the best and the brightest to be tomorrow's leaders and experts in international trade. There are several implications to improve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cooperation with the author's 6 years experience. This paper covers the solution of the problems in the course of collaboration with corporate partners, including the local governments.

Key Words : Trade Incubator, Government-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International Trade

\* 이 논문은 2006년도 강릉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서론

최근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고 글로벌전자무역이 확산되는 등 무역교육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시점에 무역전문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양성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

주지하다시피, 무역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되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더욱이 무역은 전형적으로 인적자원에 의존되어 있는 산업이므로 인재양성이 아주 중요한데, 무역인력이 공급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역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은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rade Incubator 사업의 6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문헌을 재조명하는 탐색적 연구에 설문조사결과 및 사례연구 방식을 가미하여 연구를 진행한다.<sup>1)</sup> 본 연구는 산·관·학 협력을 통하여 무역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한 분석보다는 산·관·학 협력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연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Trade Incubator 사업의 후속으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무역인력양성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 사업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한다.

## II. 산·관·학 협력과 인력양성모형

### 1. 산·관·학 협력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산·관·학 협력’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산업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고등교육기관 간의 연구와 교육에서의 협력 및 제휴관계를 지칭한다. 산·관·학 협력 활동은 무역부문에서 절실하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체는 정보입수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바이어 발굴활동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외국어능력 부족, 무역서류작성능력 부족 등 특유의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도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와의 협력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산업계와 학계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목적에 부합된다.

한국은 산업자원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성화대학선정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산업자원부와 한국무

1) 지난 6년간 강릉대학교II사업단장을 역임하였고, 전국대학II사업단협의회회장을 역임한 필자는 II사업을 수행하면서 각 대학의 II사업단장 및 조교들에 대해 조사한 설문결과와 수차례의 워크숍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II사업과 같은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사업에 대해 고찰하였다.

역협회가 IT사업, 교육인적자원부가 누리사업 등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산·관·학 협력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학생들은 다양한 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위의 다양한 사업과 병행하여 일본의 인턴십제도와 같이 그 지역의 정부기관과 기업, 대학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실시하면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sup>2)</sup>

한편, 지방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지부, 지자체별로 무역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나 연간 개최 횟수도 적고, 주로 실무인력의 재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나마도 실무자들이 현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집중적인 장기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부분 단기교육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인 장기교육을 통한 무역인력양성이 필요하다.<sup>3)</sup> 산·관·학 협력을 통해 무역인력을 양성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무역기업, 대학, 그리고 학생 모두 긍정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sup>4)</sup>

산·관·학 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전문연구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되 필요할 때마다 방문지도가 이루어지고 업계나 관계와의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 등이 필요하며, 그러한 대학의 활동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무역업계에서 고급간부로서 다년간 무역회사 경력을 가진 자들을 강사 또는 겸임교수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의 현장중심의 교육은 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취업확대 등에도 기여하게 된다.<sup>5)</sup>

한국에서 인력양성사업의 모형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즉, ①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② 계약형학과제사업, ③ 현장실습제도(Internship), ④ 공학교육인증제도, ⑤ 경영교육인증제도, ⑥ NURI 사업, ⑦ BK21사업, ⑧ 특성화학과사업 등이다.<sup>6)</sup>

## 2. 무역인력양성 모형

### 1) 산학협력 인력양성 유형

산학협력 인력양성의 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sup>7)</sup> 즉, 유형1은 '글로벌혁신형' 산학협력 인력양성, 유형2는 '국가혁신형' 산학협력 인력양성, 유형3은 '지역혁신형' 산학협력 인력양성이다. 산·관·학 협력 무역인력양성체제는 대학별 특성화의 진전과 함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게 될 것이다. 대

2) 김원배, 유병부, "국제상학적 관점에서의 한국과 일본 무역학교육의 비교분석," 「국제상학」, 제21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12., p. 19.

3) 이호진, "현장 중심의 무역전문인력 양성 방안," 「2004년도 하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 6. 5., p. 80.

4) 김학민, "무역학의 미래 교과과정," 「2007년 전자무역포럼 및 국내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 12., p. 257 참조.

5) 윤충원, "무역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무역학회지」, 제29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4. 6., p. 27.

6) 무역기금운영위원회, Global 무역인재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2006. 12., pp. 29-71.

7) 최희선,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산학협력 인력양성체제 구축방안," 「KIET 산업경제」, 2007. 3월, p. 11.

학별로 앞에서 언급한 유형1, 유형2, 유형3 중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에 따라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진다. 즉, 세계 일류대학을 추구하는 대학은 대학원 중심의 연구중심대학으로 글로벌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국제화를 추구하고 국가기관을 리드하고 글로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전국거점대학은 중앙정부 및 일반 기업들과 연계하고 협력하여 인턴십을 통한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공동연구를 통해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혁신을 달성코자 한다. 한편, 지역거점대학은 지방정부 및 지역소재기업들과 연계하고 협력하여 인턴십을 수행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인력을 양성한다.

따라서 산·관·학 무역인력양성체계는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모형을 제시하고 그 모형에 따라 성과를 평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지난 6년간의 TI사업은 하나의 모형에 의해 일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평가함으로써 대학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글로벌무역인력사업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이 포함되어 추구하는 유형은 더욱 다양화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대학별 추구모형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2) 무역전문인력양성 모형에 관한 선행연구<sup>8)</sup>

기업이 바라는 무역인력은 무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닌 사람이지만 현재 무역 관련 대학교육은 이론교육에 치우쳐 있다는 비평이 존재한다.<sup>9)</sup> 또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력의 시장수요를 어떻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김학민 교수는 무역전문인력 양성모델의 검증을 위해 제1연구명제로 ‘무역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력양성 위기가설’, 제2연구명제로 ‘역량기반 양성효과 가설’, 제3연구명제로 ‘심화과정 양성효과 가설’, 제4연구명제로 ‘경력개발계획(CDP) 실천으로 인한 양성효과 가설’,<sup>10)</sup> 그리고 제5연구명제로 ‘인력양성 정보시스템효과 가설’을 검증한 다음, 지식기반 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sup>11)</sup>

김학민 교수는 무역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은 교육기관에게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관·학이 상호 협력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보화시대의 전자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교과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up>12)</sup>

TI사업은 김학민 교수의 연구결과에 상응하는 무역인력양성사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TI사업의 운영결과를 통하여 무역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재조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김학민, 이호형, 안지정은 무역인력양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8) 김학민,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기반의 협력모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9권 제4호, 2004. 8., pp. 231-257.

9) 상계논문, p. 233.

10) 경력개발계획(CDP: Career Development Plan)이란 개인의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사관리 및 인력개발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11) 김학민(2004), 전계논문, pp. 236-252.

12) 상계논문, p. 253.

즉, ① 산·관·학 협력 필요성 및 당위성에 관한 연구로써 무역인력의 수급불균형 현상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관·학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형태의 주장이다.[안세영·심상렬(1999), 정진화 외(2000), 김신복(2000), 임혜정·최병춘(2000), 문희철(2000), 이광석(2002)] ② 대학을 비롯한 무역인력 공급기관들의 무역교육의 혁신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이며, 그 결과 무역학 교과과정의 개편을 권고하고 있다.[김재식(2000), 문희철(2000), 한국전자거래진흥원(2002), 김형만 외(2003),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2003)] ③ 무역전문인력의 수급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무역인력의 수급유연성을 상시적으로 확보하자는 연구들이다.[정진화 외(2000), 문희철·송우용(2002), 김형만 외(2003)] ④ 무역인력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개발계획(CDP)을 해야 한다는 연구이다.[Baruch(1999), 김학민(2004), 서균석 외(2003)]<sup>13)</sup>

### Ⅲ. TI사업과 무역전문인력양성

#### 1. Trade Incubator 사업의 개요

TI사업은 무역실무 및 현장 학습을 통해 이론 위주의 대학교육에 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무역실무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2001년 9월부터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전국 10개 지역의 대학과<sup>14)</sup>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TI사업단장과 대학 2~3학년생 30명 내외의 TI요원으로 구성된 TI사업단을 설치하여 TI요원에게 무역실무교육, 산업체 현장실습, 해외마케팅 활동 등 무역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최대 25개 대학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표 1>TI사업의 개요

TI 기수	전국 TI사업의 경과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사업시작시점	2001.9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사업종료시점	2002.8	2003.7	2004.7	2005.7	2006.7	2007.7
참여대학 수	10개	10개	23개	25개	25개	20개

13) 연구자의 연구문헌에 관하여는 참고문헌 참조: 김학민, 이호형, 안지정, "무역인력의 조기경력개발계획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3호, 2006. 6월, pp. 249-251.  
 14) 최초 선정된 10개 대학은 인천대(경기·인천), 조선대(광주·전남), 영남대(대구·경북), 순천향대(대전·충남), 부산대/인제대(부산·울산·경남), 강릉대(강원), 전북대(전북), 제주대(제주), 충북대(충북)이다.

TI요원 선발	300명	300명	1,150명	1,236명	1,336명	600명
TI요원 수료	262명	298명	861명	915명	1,250명	600명
국고예산총액	6.3억원	6.7억원	13.5억원	13.5억원	13.5억원	11.5억원
1인당 교육비(백만원)	2.10	2.23	1.17	1.09	1.01	1.92

사업의 추진체계를 보면, 산업자원부가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대학별로 20여개의 산업체가 각 TI사업단에 참여하고, 선정된 대학에서 TI사업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sup>15)</sup>

산정된 1인당 교육비를 공학교육 지원금액과 비교할 때, 우수한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특히, 국고예산은 대학별로 4천만 원 이하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운영하는 방식이므로 실제로 대학별로 선발된 TI요원 1인당 지원되는 국고금은 <표 1>에 나타나 있다시피 최대 223만원, 최저 101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군다나 대학별로 지원된 국고금에서 일정부분은 TI사업단 관리를 위해 채용된 조교의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로 지출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TI요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더욱 적어진다.

또한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국회에서 요구하는 청년실업해소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TI요원의 수를 예산 및 지도교수의 추가확보, 그리고 공간의 확대도 없이 대학별 30명에서 50명으로 급증시킴으로써 운영의 곤란을 초래하게 되어, 제6기에 들어서면서 선발인원을 다시 대학별로 30명으로 감축하였다.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은 100년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는 교육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실교육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 2. TI사업에서의 무역현장교육

선발된 TI요원들은 약 50시간의 집중교육 외에 대체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즉, 취급할 아이템(item) 선정, 협력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 협력업체에서의 업무수련 후 수출업무 지원, 전자무역 지원, 국내외시장 개척, 국내외 전시박람회 지원, 통번역서비스 지원, 해외시장정보의 수집 제공 등이다.

TI사업 운영상 애로점은 사업의 실제현장에 임해 있다는 점에서 외국어구사능력의 부족을 비롯해 일일이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그 중에서도 대학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특이사항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I요원이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외국거래선과 사업을 전개하는데 현실적 애로가 있다. 교수는 이중 직업이 금지되는 관계로 사업의 전면에 나서 흥정을 벌일 수 없다. 때문에 TI요원이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 번의 실수는 거래단절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TI요원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저지를 지 알 수 없다. 큰 실수가 아

15) 산업자원부, 한국무역협회, "Trade Incubator 운영요령," 2001. 9.

니더라도 학생 티가 난다는 점이다. 예컨대, item posting 후, 외국의 관심 있는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당황하여 제대로 응답을 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전문가가 아닌가 보죠?”라는 말 한마디로 상황이 끝나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은 자신과 상담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이 상거래 연습대상이 된 것으로 생각하여 돌아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둘째, TI요원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수업시간, 시험기간, 공공행사 등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무역거래의 성사를 위해서는 신속한 회답이 필수인데 시험기간에는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다. 때문에 보통 팀별로 운영하도록 지도하지만 팀워크가 잘 맞지 않는 팀이 있기 마련이다. 셋째, 해외바이어에게 대학의 주소를 사용해서 우편물을 보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아해한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거래실적을 물어보면서 신용조회를 해오기도 하므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때문에 시내에 있는 사무실을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보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차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넷째, TI사업기간이 1년 단위이므로 TI요원들은 거래상대방과 장기계약이나 외상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고학년 학생보다 저학년 학생이 장기적인 사고로 접근하였다. 다섯째, TI요원들의 사업자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도유망한 계약이라도 다소간의 위험이 있다 싶으면 계약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발생하였지만, TI요원들은 무역의 실천현장에서 외국어 및 무역전문지식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외국인 무역업자와 만나 자신을 소개할 때 명함의 제시나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 관심을 가지므로써 인성교육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특히 현장체험이 체화되어 무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모습은 무역인력양성의 무형적 가치를 드높게 하였다.

## IV. 무역인력양성의 과제와 방향

### 1. 산·관·학협력의 과제와 방향

#### 1) 산·학협력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

기업체의 71%가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담조직이 있는 기업체는 9%에 불과하다.<sup>16)</sup> 산·학협력과 관련해서 기업 측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기술 및 노

16) 장기진 교수 등은 2006년 전국 e비즈니스관련 대학(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300여개와 산업체 100여개, 도합 400여개를 대상으로 대학과의 연계 학위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장기진, 신봉근, 박인섭, “e비즈니스분야 산·학협력을 통한 학점/비학점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2007년 하계 정책포럼 및 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 6. 14., pp. 577-579.

하위 유출 위험으로 조사되었다.<sup>17)</sup> 실제로 TI사업에서 TI요원들이 협력파트너로 선정된 기업도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이득이 없을 경우, TI요원에게 회사의 중요 영업기밀(예컨대, 수출단가 등)을 잘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

산학협력의 파트너인 기업체의 열악한 산학협력환경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산학협력이 쉽게 전개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상장기업체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산학협력은 주로 대학 측이 주도하고 기업 측은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장교육, 맞춤형교육, 인턴십 등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의 파트너인 기업체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외국계 기업에는 인턴십이 채용의 주요 경로로 이용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의 인턴십은 우수인재 채용경로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즉, 한국의 인턴십은 기업의 필요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턴십이 산학협력 교육의 실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턴십의 실질적 성과를 도모하는 본격적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인턴십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대학의 역량을 높이는 한편, 비영리기관을 설치하여 인턴십 또는 공동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개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8)</sup>

문제해소의 방법으로 김학민 교수는 무역인력수급정보를 체계화한 무역전문인력 양성포털의 구축을 주장하였다. 즉, 무역인력을 공급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수요에 대한 정확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세부 전문분야 및 경험이력과 함께 시장의 수요정보를 결합하여 인력수급 매칭시스템이 공급체인 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무역전문인력의 수급실태를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교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력수급의 궁합맞추기 문제(mismatching)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전문 인력개발 인프라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인력양성 정책지원이 부족한 점 등이 각 경제주체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업을 바탕으로 무역전문 인력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19)</sup>

특히, 지방에는 고도의 무역업무를 수행할만한 중견기업이 충분치 않아 지역소재대학으로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인턴십을 수행케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일정기간동안 대학생들이 무역업무에 대한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턴십 및 산학협력 교육의 중개역할을 맡을 기구를 설립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 2) 지역대학에 전자무역 HUB 구축하여 중소기업 지원

전자무역의 활용분야는 대부분 해외홍보 및 마케팅, 시장조사와 거래선발굴 등 시장개척을 위한 초

17) 상계논문, p. 580.

18) 최희선(2007), 전계논문, p. 20.

19) 김학민(2004), 전계논문, pp. 235-236.



보적인 전자무역에 국한되어 있다. 무역업체들이 전자무역을 활용하는데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전자무역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확보의 어려움과 정보인프라의 확보문제가 가장 두드러진다.<sup>20)</sup>

최신 전자무역은 기성세대들보다 젊은 대학생들이 더 경쟁력이 있으므로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전자무역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에 전자무역 Hub를 구축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산학협력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학생에 대한 전자무역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대학은 실용교육을 펼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충남소재 모 대학의 e비즈니스 인력양성사업단은 천안시 소재 무역유관기관, 산업단체, 조합, 기업 등이 참가하는 긴밀한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실질적인 기업지원 및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있다.<sup>21)</sup> 또한 2008년 2월 14일~15일에는 전자무역전공 교수 30여명이 참석하여 u-Trade Hub의 확산을 위한 Workshop이 강릉에서 개최되었는데,<sup>22)</sup> 향후 중소기업 지원에 상당부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지방자치단체와의 무역협력관계 강화

일본의 경우, 지역정부는 지역 내에서 유능한 인재의 육성과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각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인턴십제도를 실시하고 있다.<sup>23)</sup> 2005년 6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4년제 대학이 인턴십제도에 참가한 비중은 2002년에 46.3%였으나 2003년에는 55%, 2004년에는 59%로 증가하였다.<sup>24)</sup>

한국도 지방자치체가 시행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고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에 대해 자발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이 무역에 의존하였듯이 지역의 발전 또한 무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지역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특화산업의 수출성공을 위해 지역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학의 무역학과도 합심하여 협력해야 하는 것은 상호 도움이 되므로 당연하다 할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은 지역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무역인력의 양성과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지식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에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강릉대학교TI사업단의 경우 강원도청 및 강릉시청으로부터 3년간 대응자금(matching fund)의 지원을 약속 받을 수 있었다.

20) 2007년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충남지역 무역업체들의 전자무역 활용 및 전자무역 인력수급 실태를 파악하고 그 전망을 조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38개 표본업체 중 설문에 응답한 업체는 25개이다: 조원길, 김연동, "산학연계를 통한 무역교육의 실전화 방향," 「2007년 전자무역포럼 및 국내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 12. 13., p. 633.

21) 상계논문, p. 638.

22) 한국무역협회,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 전자무역 교수요원 심화과정 Workshop」, 2008. 2.

23) 김원배, 유병부(2006), 전계논문, p.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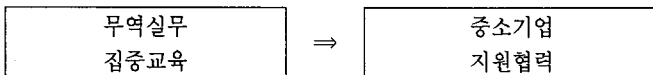
24) 상계논문, p. 18.

#### 4) 인턴십의 단계별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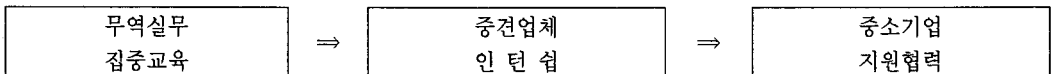
산학협력을 통한 인턴십의 모형을 보다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듯이 [TI사업단의 인턴십 모형]에서 [인턴십의 개선모형]으로 보다 세분화시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수출업무를 지원하려 해도 TI요원의 실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기업과는 달리 지방에 소재한 영세한 중소기업은 수출을 비롯한 무역에 풍부한 경험이 없어 TI요원이 현장에서 보고 배울 것이 많지 않다. 결국 지방소재 영세중소기업은 무역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인턴십 파트너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먼저 중견무역업체에서 일정기간 연수시킨 다음 현장경험과 무역지식을 갖추게 되었을 때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단계별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 [TI사업단의 인턴십 모형]



##### [인턴십의 개선모형]



[그림 1] 인턴십의 단계별 접근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무역담당인력이 있으므로 TI요원의 지원이 불필요하고, TI요원에게 인턴십을 제공할 의지가 없거나 약하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선행이 요구된다. 즉, 대기업들이 솔선하여 인턴십에 참여하겠다는 기업체 풀(pool)을 형성하여 대학 측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 2. 무역인력양성의 과제와 방향

### 1) 학생의 선발과 수료

#### ① 선발된 TI요원의 경쟁 및 중도탈락 필요성

TI사업에서 각 사업단을 평가하는 기준 중의 하나는 30명을 양성하여 배출하는지의 여부였다. TI사업이 해를 거듭함에 따라 선발인원에는 제한을 없애고 일단 30명을 배출하도록 정부는 각 대학에 요

구했다. 산업자원부는 다수의 무역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해야 한다는 실적에 얽매어 각 사업단마다 30명씩을 배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였다. 물론 산업자원부도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실적을 제시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었다. 그렇지만 TI활동에 저해되는 요원을 임의적으로 탈락시키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sup>25)</sup> 부실하게 TI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준다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의 부실을 자초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2005년말 전국대학TI사업단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TI평가모형에 관한 설문' 문항8번 'TI요원들이 의욕이 부족하거나 적응을 잘 못할 때에는 제약 없이 탈락시킬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TI사업단장 15명이 응답한 결과 점수는 5점 척도 중 1.53점이었다. 즉, '정말 그렇다: 1점'과 '그런 편이다: 2점' 사이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선발은 비록 30명을 했다손 치더라도 사업단장이나 지도교수가 평가할 때 부실한 요원은 과감히 정리하고 소수의 학생만을 지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옳았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우수한 능력을 지닌 학생만이 TI사업의 수료증을 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성공사례를 남겼을 때, 후배 학생들이 자극을 받아 더욱 노력하게 됨으로써 그 성과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 ② TI요원 수의 적정성

교수 1인당 담당하는 양성인력의 과다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무역학과에는 무역인력양성과 관련된 전공교수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30명~5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무역전문인력으로 양성시키라고 하는 것은 대량생산시대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가 급속히 글로벌화 되어 가는 환경 속에서 한국의 무역전공학생이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일류대학처럼 교수 1인당 10명 이내의 소수인력을 배정하여 양성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 대학별로 무역전문인력양성사업을 배정하기 보다는 전국을 통틀어서 개별 교수별로 10명 이내의 소수 학생을 선발하여 사업에 참여토록 신청하고 그렇게 참여를 신청한 교수들을 총괄적으로 선정하여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하여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무역실무교육은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무역협회나 KOTRA의 무역전문교육기관에서 위탁시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어교육도 또한 현실적으로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해외에서 문화체험이나 어학연수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1년의 두 번 방학 중 한 번은 해외비즈니스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교실교육에서 대량생산식의 교육을 할 경우에는 대단위 학생을 교육시킬 수 있지만, 현장중심으로 학생을 지도할 경우에는 교수가 지속성을 지니고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

25) 영남대학교TI사업단, "TI사업 운영(5기) 활성화 방안," 「향후 TI사업 활성화 방안」, 25개 대학 TI사업단, 2005년 TI Workshop 자료, p. 5.

로 대학당 30명~50명의 학생을 한정하지 말고, 교수 1인당 10명 이내의 학생을 한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무역인력 양성사업은 동일한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전국의 더 많은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공과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는 계약형학과제사업의 경우, 참여조건 중 참여학생의 수는 10명 단위로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sup>26)</sup> 그런데 TI사업단의 경우는 예산도 많지 않으면서 참여학생의 수를 사업단별로 30~50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 과다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저하를 우려케 한다.

교수 1인당 학생수를 보면, 한국은 39명(2004년), 일본은 11명(2002년), 미국은 14명(2002년)으로 한국 대학교육의 기반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재정을 GDP비중으로 비교해보면 OECD 평균은 1.1%인데 한국은 0.3%에 불과하다.<sup>27)</sup> 이러한 고등교육의 환경을 반영하듯, 한국의 대학 졸업생들은 고급인력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나 국제적 고급인력으로서의 경쟁력은 취약한 실정이다.

### ③ TI프로그램의 연속성 부족

TI사업은 학생지원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이 졸업하고 나면 대학에는 남는 것이 없다. 즉, TI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지적자산이나 기업연계 네트워크가 학생들의 졸업과 동시에 사라지는 점이 아쉽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무형자산을 축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순간 그동안 쌓아놓았던 무형자산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런 문제점을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 3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을 동시에 선정하는 것이었다.

## 2)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① 무한경쟁으로 인한 정보공유의 폐해 예소

20~25개 사업단(장)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상호협력을 추구하는 사업단(장)일수록 노하우가 공개되어 경쟁 베이스의 평가에서 손해를 보고 탈락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사업단(장)간 무한경쟁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여 결국 폐쇄적 운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협상이론상 증명된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2005년말 전국대학TI사업단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TI평가모형에 관한 설문' 문항3번 「25개 대학을 지나치게 경쟁관계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문항에 대해 TI사업단장 15명이 응답한 결과 점수는 5점 척도 중 1.60점으로 나타났다. 즉, '정말 그렇다: 1점'과 '그런 편이다: 2점' 사이로 나타났다.

26) 무역기금운영위원회, Global 무역인재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2006. 12., p. 35.

27) 상계보고서, p. 23.

따라서 무한경쟁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을 설정해놓고 그 기준을 상회하도록 하여 평가하는 방식이 전체 무역인력양성을 발전시키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명대학교TI사업단도 보고서에서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즉, 평가의 목적을 단순한 경쟁유인 제공보다는 일정수준의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TI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더 타당하다고 하였다.<sup>28)</sup>

## ② 세계수준의 무역전문스쿨 태동 필요

글로벌 무역이 급속히 진전되는 오늘날 무역관련 과목들은 다양성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대학 무역학과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이다.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는데 비해 대학은 과거의 영세한 규모로 알고 많은 무역지식을 두루 가르쳐야 하는 방식에 머물고 있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과거 시골의 의원은 어떤 종류의 환자든지 가리지 않고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세부전공별로 전문의가 등장하고 종합병원이 출현하여 환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Harvard Law School은 550명의 학생에 비해 246명의 교수진(faculty members)을 보유하고 있다.<sup>29)</sup>

한국 특유의 고급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역전문스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 대학에 특수대학원 형태의 경영대학원 또는 무역대학원이 존재하고 있으나 야간대학원으로서 고급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아카데미가 있으나 학위수여제도가 없어 매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다수의 고급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sup>30)</sup>

무역전문인력을 제대로 양성하려면 다수의 다양한 무역관련 전공의 교수를 무역전문스쿨에 모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 다음 양성하고 배출하는 방식이 되어야 이상적이라 할 것이다.<sup>31)</sup> 물론 무역관련 전공서적이 풍부하게 집결된 무역전문도서관도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교수들의 대학 간 이동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제는 대학 간 학과의 빅딜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연구와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보다 이상적인 산·관·학 협력에 의한 무역전문인력 양성이 실현가능해질 것이다.<sup>32)</sup>

28) 계명대학교 TI사업단, "대학별 향후 TI사업 운영 활성화 방안," 「향후 TI사업 활성화 방안」, 25개 대학 TI사업단, 2005년 TI Workshop 자료.

29) [http://en.wikipedia.org/wiki/Harvard\\_Law\\_School](http://en.wikipedia.org/wiki/Harvard_Law_School)

30) 윤충원, "무역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무역학회지」, 제29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4. 6., p. 27; 최근 무역아카데미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CMU) 석사과정(MSIT e-business Technology)과 협력학위과정을 통해 e-비즈니스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31) 대학별로 영역별 특성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별로 컨소시엄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원배, 송수련, "무역학과 교과과정과 무역학의 진로," 「국제상학 교과과정 개발의 과제」, 한국국제상학회, 2004. 12. 3., p. 66.

32) 김원배와 유병부 교수는 지역별 컨소시엄형태의 운영방식으로서 기존의 학과 명칭이나 입학인원을 두고 협의체의 협의 하에 영역별 교과과정을 대학별로 분류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김원배, 유병부(2006), 전계논문, pp. 20-21.

사실 무역인력양성 경험을 지닌 교수들이 이합집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대학 간 인적자원의 이동이 극히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규모의 '무역전문스쿨'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체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수의 대학만을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지정받지 않거나 못한 대다수 여타 대학에서 '무역학'이 쇠락하여 오히려 '무역학'의 몰락을 자초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③ 컨설팅 전문가의 지역단위별 선정 및 활용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가 시간이 많아야 하고 무역업무 경험이 풍부해야 하는데 그런 인적자원과 시간적 여유가 현실적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컨설팅회사를 두고 있지만 서울에 소재한 컨설팅회사가 지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일일이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컨설팅회사가 무역실무경험을 충분히 지니고 있어야만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업무지원이 가능하다.

TI사업의 경우, 전국 대학TI사업단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하나의 컨설팅회사가 지정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다보니 서울에서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며 한 달에 한 번 꼴로 자문을 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형태는 효율적인 자문이 되기 어렵다. 특히 학생들이 시험기간이거나 방학 중이거나 관계없이 컨설팅회사 중심으로 스케줄을 잡아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은 고객만족지향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컨설팅예산을 분할하여 TI사업단별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고 선정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대학별 특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종합무역상사 또는 전문무역상사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와 같은 무역유경험자 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항시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예산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정부에서 일정금액만 지원된다면 대학 측에서는 겸임교수직이나 전임에 준하는 시간강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문가를 대학에서 무역전문인력양성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수출실적 위주의 평가 지양

TI사업 평가기준 중의 하나는 수출실적이다. TI요원들이 주로 취급하는 제품은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들이다. TI요원은 1년간 활동하는데 전반기에는 주로 교육을 받고 후반기에 실질적으로 현장실습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약 6개월간의 짧은 기간 내에 수출실적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기간이 짧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함정이 있다. 취급하는 제품에 장기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과 기업 간의 단기간 협력관계에서 수출을 목표로 정하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무리한 수출을 감행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훗날에 발생할 클레임의 위협에 노출된다.

즉, TI요원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을 믿고 수출하여 실적을 올린 다음 TI사업단을 수료한 후, 그 다음 TI 기수에 그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한 클레임이 걸려 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TI사업에서 협력업체의 제품을 믿고 TI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이 책임 있게 수출하는 것은 전문수출기업이 아닌 대학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산학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역인력양성사업의 평가에 단기적인 수출실적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강릉대 TI사업단의 경우, 화장품냉장고를 취급하였으나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여단이가 고장이 나고 소음이 발생하는 등 상품의 결함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수출만능평가방식을 지양하고 TI사업단이 기업에 대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⑤ 사업단 평가방식의 한계

TI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에는 애매모호한 점이 상당히 많다. 또한 현장실사를 통한 평가가 아니라 보고서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 높지 못하다는 평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개별 TI사업단에 거액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와 얼마나 잘 협력하여 지역기업과 산학협력을 수행하는 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무역인력양성사업의 선정에서도 현장실태점검을 하지 않았는데, 평가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이 필요하다.

### ⑥ 획일화된 교육의 지양

교실중심/교과중심 교육은 무역아카데미의 별도 교육이 없어도 대학의 정규교과목만으로 충분하다. 특히 무역학과 출신 학생들은 대학의 정규과목에서 수강하였던 내용을 또 다시 수강해야 하므로 식상해 한다. 이에 비해 무역학과 외의 타학과 출신 학생들은 집중교육을 시켜도 무역에 대한 기본지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단기간에 소화를 해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I프로그램에서는 대학 정규과목 외에 야간에 하루 4시간씩 집중교육을 시키므로 학생들에게 무역에 대한 호감을 잃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교실에서의 집중강의 대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중심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TI프로그램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중심의 교육을 거의 강제함으로써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전국 대학에 대해 획일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강요하는 대신 대학별로 특성화된 무역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의 개설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기준도 다양화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2005년말 전국대학TI사업단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TI평가모형에 관한 설문' 문항4번 「대학마다 사정과 특성이 다르므로 일률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문항에 대해 TI사업단장 15명이 응답한 결과 점수는 5점 척도 중 1.67점이었다. 즉, '정말 그렇다: 1점'과 '그런 편이다: 2점' 사

이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영어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언어를 습득토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글로벌화에 보다 합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대부분의 평가기준이 영어, 특히 토익에 맞춰져 있어 다양성이 결여된 편향교육이 되어 학생들의 미래경쟁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기존 영어권 위주의 무역인력양성 시스템으로는 새롭게 부상하는 비영어권의 신규시장에 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외국어계열의 학과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외국어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다양한 해외지역의 상관습과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도록 비영어권의 무역전문인력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3) 산·관·학 협력

#### ① 강의실중심에서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대학과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간의 보다 원활한 협조를 통해 무역인력양성사업의 긍정적 시너지효과 도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학의 TI사업이 단순히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의 사업대상이어서는 발전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상호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관계 속에 무역인력양성사업은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글로벌무역인력양성사업의 경우, 기본이론교육으로 300시간을 강의하고 실무교육과 현장교육을 포함하여 총 1,000시간의 교육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학은 한시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나중에 강의시수 부족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교수충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무역학에 대해 충분히 강의를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업단 선정 시에 확인하기만 하면 될 것을 구태여 사업단 선정요건에 명시하여 돕으로써 무역인력양성사업의 축을 현장중심보다 교실중심으로 옮기는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학에서 긴요한 것은 채용과 연수협력기업의 명단이다. 영세한 중소기업에서는 TI요원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오히려 지원해줘야 하는 형편이다. 아무런 경험도 없는 TI요원이 중소기업을 얼마나 잘 지원해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TI요원들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고 배울 것이 많은 규모 있는 기업에서 인턴십을 해야 한다. 그런 협력기업을 지방에서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실제로 필요한 이런 업무는 무역인력의 현장중심교육을 위해 무역아카데미나 산업자원부에서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사안이다.

#### ② 현장실습의 시점

무역전공실습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교육체계상 바람직한가? 이에 대해 저학년이 아닌 고학년을 대상으로 훈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sup>33)</sup> TI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3학년부턴, 글로벌무역인력양성

33) 오세창, "21세기 무역전공자들을 위한 국제상거래영역의 모델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교과과정 개발의 과



사업의 2학년부터 훈련대상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학 1~2학년생들은 전공학습에 그리 열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다가 3학년이 되어서 학습에 대한 욕구가 발동되기 시작하여도 1년 남짓 전공을 공부하고 나면 4학년이 되어서는 어학공부에 대부분 열중하면서 취업준비에 바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전공학습은 1~2년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저학년부터 무역의 현장에 투입하여 현실과 부딪히게 함으로써 전공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TI사업이나 글로벌무역인력사업도 나름대로 가치 있는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김학민 교수 등은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무역학과 3~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조기 경력개발계획(CDP)의 수립이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몇 가지의 가설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경력계획이 개인경력전술, 경력전망, 경력몰입에<sup>34)</sup> 선행요인이 된다는 가정에 대해 경력몰입과 경력전망에 대해서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개인경력전술이 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김학민 교수 등은 "예비무역인력은 상대적으로 중견무역인력에 비해서 자신의 경력을 스스로 책임지고 전문적으로 적응해나가는 개인지각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sup>35)</sup>

실제로 졸업이 임박한 시기인 3학년 2학기에 경력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저학년 시절부터 경력개발계획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무역현장의 실무를 경험토록 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접근이 절실하다. 실제로 TI사업을 수행하면서 TI요원들로부터 받은 반응(feedback)과 조교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바로는 교실에서 깨닫지 못한 무역학습의 방향을 산학협력의 현장에서 많이 발견하였다는 것이다.<sup>36)</sup>

TI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3학년 2학기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TI요원을 선발하려 하였으나, 1년 단위의 사업이 종료된 후 다음 기수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 받기 위해 2학년 학생을 일부 선발하였다. 또한 지방대학 무역학과에서 산업자원부가 요구하는 30명의 요원선발 요건을 채우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요인도 함께 작용되어 3학년 학생과 함께 2학년 학생이 선발되었다.

그러나 TI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1년간의 교육훈련으로는 충분한 수준의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저학년 학생을 선발하여 2년간 교육훈련을 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이 변형되어 전개되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방학을 이용하여 취업예비생들이 일정기간(1주일에서 1개월 간)동안 기업에서 취업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장래에 취직하려는 업계와 직종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업계에 대한 흥

제1, 한국국제상학회, 2004. 12. 3., p. 78.

34) 김학민 등이 연구를 위해 조작적으로 정의한 '경력몰입'의 개념은 개인의 직업(전문직을 포함)에 대한 각자의 태도, 혹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정도를 말한다. 김학민, 이호형, 안지정(2006), 전개논문 p. 259 참조.

35) 상계논문, pp. 248-266 요약 인용.

36) 2002년 10월 4일 제2기 TI사업 제주도 워크샵에서 전체 10개 대학 중 8개 대학의 TI교과가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턴십을 통하여 학생들은 취직 전에 자기의 적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사회인으로서의 상식과 예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많은 대학과 기업이 인턴십제도에 참여하고 있다.<sup>37)</sup>

그러나 4학년이 되어야 인턴십을 할 수 있게 될 경우,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인턴십을 통해 발견하였다는 치더라도 적성에 맞는 새로운 전공을 학습할 기회는 이미 지나가버리고 없는 시점이 되고 만다. 지학년 때에 인턴십을 통해 장래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4) 무역인력양성사업의 확산 대안

국가적으로 무역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는 공통된 분석이다. 문제는 대학졸업 무역전공자의 공급은 초과상태이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역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부족한 무역인력을 공급하지 못하면 무역입국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원가상승요인이 된다. 즉, 부족한 무역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재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족한 무역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여 공급하는 것이 국가적 핵심과제이며, 공공성을 띠고 있다. 관련법에서도 무역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TI사업에 이어 일부 대학과 일부 지역에서 글로벌무역인력양성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2009년부터 로스쿨이 출범하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무역인력을 양성하는 무역학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무역학을 살려 저비용의 무역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무역인력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기에 기존의 글로벌무역인력양성사업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무역인력양성사업의 확산방안을 제안해본다. 우선 전국적으로 무역실무전공 교수 100명을 선발한다고 가정한다. 교수 1인당 10명씩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토록 하되, 그 중에서 5명은 과정 이수 중 탈락시키고 5명만 배출토록 한다. 소요 예산을 추정해 보면, 교수 1인당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100명의 교수를 선정할 경우 연간 20억 원이 소요된다. 선정된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해당대학에서 각각 대응자금을 확보하도록 하여 사업단을 운영토록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 양성가능 무역전문인력은 모두 연간 500명(= 교수 100명 × 학생 5명)이 된다.

이러한 확산방안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된다면 전국 각지에서 무역전문인력이 양성되므로 지역소재 중소기업과의 활발한 산·관·학 협력이 이루어져 교육효과 및 기업지원효과 그리고 국가정책목표의 달성이 가능하게 된다. 여타 사항은 TI사업의 추진형태를 준용하되, 본 연구논문에서 언급한 개선부분을 감안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37) 김원배, 유병부(2006). 전개논문, p. 17.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무역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야 할 것인지 지난 6년간 시행된 Trade Incubator 사업의 산·관·학 협력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학 협력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 TI사업 경험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여지가 아주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무역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기존의 TI사업에서는 사업단별로 최소한 30명씩의 무역인력을 양성하여 배출하도록 강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제한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1년간 교수 1인당 10명 이내로 축소하여 무역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무역실무를 전공한 교수가 많은 대학은 더 많은 수의 무역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대학마다 무역실무를 전공한 교수는 대부분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양성할 무역인력의 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의 수는 처음 10개 대학에서 나중에는 20~25개 대학으로 증감되었다. 무역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은 대학과 지역의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무제한 지원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소규모로 더욱 많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역인력양성사업의 자유경쟁 도입으로 지방대학의 궁핍화가 예상된다.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무역학과를 자유경쟁 시키는 정책은 지방대학의 무역학과를 더욱 궁핍화시키게 될 것이고, 나아가 무역학과와 괴멸을 자초하게 될 지도 모른다.

수도권대학에는 지방대학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무역전문인력양성 사업에서 수도권대학을 선정하여 자금마저 지원하게 되면,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방대학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지방대학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도권대학에 지원이 되지 않는 학과로 체제를 변경시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방대학의 무역학과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무역학과의 대다수가 지방대학에 개설되어 있는데, 지방대학의 무역학과가 줄어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무역인력의 공급부족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지방대학 궁핍화정책은 처음에는 대다수 지방대학의 무역학과를 괴멸시키게 될 것이지만 나중에는 무역학이 수도권의 극히 소수 대학에만 존재하다가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 자취를 감추게 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은 2009년 로스쿨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국가적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산·관·학 협력을 통해 저가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100명 이상의 많은 대학 교수가 참여할 수 있는 무역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무역학의 기반을 공고히 하여 로스쿨 출범 후에도 국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하다. 그러므로 향후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TI요원, 협력업체, TI참여대학과 비참여대학 등에 대한 만족도, 성과 등을 비교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체계적 보완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신복, "종합적 인적자원 개발·관리체계의 필요와 과제," 「한국행정연구」, 제9권 제3호, 2000.
- 김원배, 송수련, "무역학과 교과과정과 무역학의 진로," 「국제상학 교과과정 개발의 과제」, 한국국제상학회, 2004. 12. 3.
- 김원배, 유병부, "국제상학적 관점에서의 한국과 일본 무역학교육의 비교분석," 「국제상학」, 제21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12.
- 김재식, "사이버무역에 대비한 무역실무교육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제9권, 2000.
- 김학민,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기반의 협력모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9권 제4호, 2004.
- 김학민, "무역학의 미래 교과과정," 「2007년 전자무역포럼 및 국내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 12.
- 김학민,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기반의 협력모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9권 제4호, 2004. 8.
- 김학민, 이호형, 안지정, "무역인력의 조기경력개발계획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3호, 2006. 6월
- 김형만 외, 「국가 인력 수급 중장기 계획 정책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 2003.
- 문희철, "사이버무역 전문인력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역학회지」, 제25권 제2호, 2000.
- 문희철·송우용, "대덕밸리 정보통신산업의 인력수급 실태분석," 「경영경제연구」,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제25권 제1호, 2002.
- 서균석 외, "개인과 조직의 경력관리가 경력만족, 경력전망,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32권 제6호, 한국경영학회, 2003.
- 안세영·심상렬, "무역의 사이버화와 우리나라 사이버 무역인력 수급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24권 제3호, 1999.
- 오세창, "21세기 무역전자들을 위한 국제상거래영역의 모델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교과과정 개발의 과제」, 한국국제상학회, 2004. 12. 3.
- 윤충원, "무역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무역학회지」, 제29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4. 6.
- 이광석, "IT분야의 인력수급과 양성," 「정보처리학회지」, 제9권 제5호, 2002.

- 이호건, “현장 중심의 무역전문인력 양성 방안,” 「2004년도 하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 6. 5.
- 임혜정·최병춘, “사이버무역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제7집, 2000. 12.
- 장기진, 신봉근, 박인섭, “e비즈니스분야 산학협력을 통한 학점/비학점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2007년 하계 정책포럼 및 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 6. 14.
- 정진화 외, “지식기반경제의 인력정책,” 「21세기 준비 연구보고서 시리즈」, 2000-17, 산업연구원, 2000.
- 조원길, 김연동, “산학연계를 통한 무역교육의 실전화 방향,” 「2007년 전자무역포럼 및 국내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 12. 13.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중소기업 정보화인력 수급불균형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2003.
- 최희선,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산학협력 인력양성체제 구축방안,” 「KIET 산업경제」, 2007. 3월
- 계명대학교 TI사업단, “대학별 향후 TI사업 운영 활성화 방안,” 「향후 TI사업 활성화 방안」25개 대학 TI사업단, 2005년 TI Workshop 자료
- 영남대학교TI사업단, “TI사업 운영(5기) 활성화 방안,” 「향후 TI사업 활성화 방안」, 25개 대학 TI사업단, 2005년 TI Workshop 자료
- 무역기금운영위원회, Global 무역인재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2006. 12.
- 산업자원부, 한국무역협회, “Trade Incubator 운영요령,” 2001. 9.
- 한국무역협회,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 전자무역 교수요원 심화과정 Workshop」, 2008. 2.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e-business 인력수급실태 및 인력양성방안」, 2002.
- Baruch, Y., “Integrated Career Systems for the 2000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Vol. 20, No. 7, 1999.
- [http://en.wikipedia.org/wiki/Harvard\\_Law\\_School](http://en.wikipedia.org/wiki/Harvard_Law_School)